

ESG 공시 의무화, 2028년 시작됩니다

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7월 8일 「지속가능성(ESG) 공시 제도화 방안」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.

01

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

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2029년 5조 원 이상까지 순차 확대됩니다.

02

사업보고서로 공시 통합

공시 채널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로 즉시 통합됩니다.

03

면책·유예 장치 병행

예측·추정 정보에 제도적 면책, 도입 초기 3년간 한시 면책이 적용됩니다.

로드맵 초안에서 최종안까지

- 2026.02.25 금융위원회, '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'에서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
- 2026.03.30 박상혁 의원 등,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(공시 법정화·면책 조항)
- 2026.04.08 민병덕 의원 등,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(의무화·공시기준 제정 근거)
- 2026.06.18 김현정 의원 등,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(공시기준 위탁 근거 신설)
- 2026.07.07 경제계(한경협·대한상의·경총 등), 도입 가속화 우려·면책 강화 요구
- 2026.07.08 금융위원회·관계부처, 「지속가능성(ESG) 공시 제도화 방안」 최종안 확정·발표

다음 단계

NEXT MILESTONE

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·처리가 다음 단계입니다.

누가, 어떻게 공시하나

공시 대상

SCOPE

2028년(FY27)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. 2029년 5조 원 이상으로 넓히고, 2030년에는 2조 원까지 확대를 검토합니다.

공시 방식

CHANNEL

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통합해 공시합니다. 스코프 3 배출량은 2031년부터 시행되고, 제3자 인증은 시행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.

10조 원 이상

2028년 1차 의무화 대상
연결자산총액 기준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

해외 주요국 공시 동향

EU

시행 · 대상 축소

일본

2027년 단계 시행

미국

기후공시 폐지 추진

점검 및 모니터링 포인트

- 01
 - 사업보고서 통합 공시 대비 내부 공시 프로세스 정비
 - 지속가능성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
- 02
 - 협력사 배출량 데이터 확보 등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
 - 2031년 스코프 3 공시 의무화 대비
- 03
 - 자본시장법 개정·제3자 인증 기준 확정 일정 모니터링
 - 인증 대비 내부 검증 역량 사전 점검

남은 쟁점

경제계는 도입 일정 가속화에 우려를 표하며 면책·지원 강화를 요구했고, 투자자·시민사회는 적극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. 제3자 인증 등 세부 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.

입법정책의 변화,
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.

— ISSUE TRACKING

— POLICY INSIGHT

— CUSTOM REPORT

로섹션 입법정책 모니터링

LAWSECTION.AI.KR

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